

12차시

15월

국제환경규제와 지구환경레짐

목차

1. 국제환경규제와 환경레짐
2. 국제환경규제의 원천과 이행
3. 주요 지구환경협약과 내용
4. 국제환경규제 형성 과정 사례

1. 국제환경규제와 환경레짐

- 레짐과 거버넌스

- 레짐 (regime): 주어진 문제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
- 레짐의 특성
 - ① 지구온난화, 생물 다양성 보존 등 특정이슈를 다룰 때 활용
 - ② 공식적인 조직이나 법보다는 실제적인 원칙, 규범, 절차 등을 수용하는 것을 강조
 - ③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이르느냐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인식적 그리고 규범적인 이해의 증진을 반영함
 - ④ 지식이 진보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진보
- 거버넌스 (governance): 다수의 관련 이슈를 다루는 체제로서 국제레짐들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네트워크로 파악됨
- 거버넌스는 중앙정부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회 및 경제체제, 비정부기구 그리고 다른 다양한 정부기구간 행동의 조정으로 나타남

-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폭발적으로 증가
 - 개별적인 레짐형성에 따른 제약: 지구환경레짐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해당국가들의 다양한 정치외교적인 측면, 경제사회적 변수, 환경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임.
 - ① 오존층 보전레짐은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진 선진국간의 갈등, CFC 대체물질의 개발이라는 기술혁신이 레짐형성과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
 - ② 기후변화레짐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갈등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간의 이해가 상반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별적으로 발전해 온 지구환경레짐은 지구의 생명지원구조의 보전이라는 큰 틀의 지구환경거버넌스로 발전되어야 함
 - 인류가 지구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철학윤리,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대안을 도출하고 모든 국가와 각종 집단들이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가 향후 인류의 존망을 결정할 것임

2. 국제환경규제의 원천과 이행

1) 국제환경규제의 원천

- 국가와 다른 국제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원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짐
 -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treaties):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협정서(agreements) 등으로 불리는 조약은 가장 중요한 구속력을 지니는 국제적인 합의
 - 국제기구의 구속력을 지니는 행위: 국제기구의 행위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음
 - 관습적인 국제법상의 규칙: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은 구속력 있는 의무를 창출하거나 조약규칙이나 다른 구속력 있는 법상 의무를 유형화하는데 기여
 - 국제적인 사법기관의 판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판결이 국제환경규제의 내용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구속력을 지니는 국제환경규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에 의해 보완
 - 연성법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채택한 지침(guidelines), 권고안(recommendations), 기타의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other non-binding acts)를 반영
 - 연성법의 규칙(rules of soft law)은 관습법의 존재를 지지한다는 국가관행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며, 향후 구속력을 지니는 환경규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줌
- 중요한 연성법으로는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만들어진 원칙의 선언(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1982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자연헌장(the World Charter for Nature), 1992년의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등

2) 국제환경규제의 이행

- 합의한 협약의 체계가 중요한 역할, 국제적인 압력의 정도, 해당국가의 조약에 대한 이해관계, 참여국가 수, 일부국가 무임승차 가능성, 환경위해 정보의 확실성, 불이행 감시의 용이성, 민간기구의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 국제환경규제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제재를 가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느냐?
 -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밟거나 특정 제재를 가하는 것; 외교적인 해결은 통상 협상과 중재, 최종적으로 조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제기; 협약조항에 의한 제재, 회원자격 박탈 등의 회원제재, 특정국가의 일방적인 제재 등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체제가 불이행절차라는 조약위반국가의 이행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제도(포괄적 불이행대응체계); 관리적 측면을 강조,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보고절차를 개선하며, 위반을 막는 방법 등 포함

3. 주요 지구환경협약과 내용

1) 기후변화협약

- 1979년과 1990년에 열린 제 1, 2차 세계기후회의를 통해 추진
-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기후협약협상을 적극 주도
- 1992년 5월 9일 유엔기후변화 협약이 채택,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2008년 기준 모두 192개 국이 가입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4일에 비준하여 1994년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효력 발생

2) 몬트리올 의정서

-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본협약인 1985년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존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
-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전적으로 유엔환경계획의 주도하에 채택

-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는 1989년 1월 1일에, 1990년 런던개정 의정서의 조정안은 1991년에, 개정안은 1992년 8월 10일에 각각 발효되었고, 1992년 코펜하겐 의정서는 1994년 6월 14일에 발효, 추가로 채택된 몬트리올 개정안은 1999년 11월 10일에 발효
- 우리나라는 1992년에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에 가입했으며, 2009년 기준 모두 196개국이 가입

3)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체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인식, 그리고 유전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87년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가 협약제정을 결정한 이래 다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
- 리우 회의 기간 중 개방되어 158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30번째 나라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
- 1993년 12월 29일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2002년 4월 기준 183개국이 가입
- 우리나라는 리우 회의 기간 중에 서명을 하였고 1994년 10월 3일에 가입

4. 국제환경규제 형성 과정 사례

1) 오존층 보호

- 오존층 파괴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유엔환경계획 (UNEP)의 오존문제조정위원회 (CCOL)가 설치된 1977년 5월부터
- 이후 UNEP를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어 오다가 1985년 3월에 비로소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이 채택
- 협약이행을 위한 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 9월에 채택되어 1989년 1월부터 시행
 - 동 의정서는 5종류의 CFC물질 (CFC-11,12,113,114 및 115)과 3종류의 할론 (Halon -1211, 1301 및 2402)을 규제대상물질로 지정하여 사용을 제한
 -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규제대상물질의 교역도 금지하였는데 교역 금지시점은 규제대상 물질별로 상이함

- 1989년 5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제1차 가입국 회의에서 규제대상물질을 2000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헬싱키선언」이 채택
 - 1990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된 의정서 제2차 가입국 회의에서는 기존 규제대상물질의 삭감일정을 단축하고 10종의 CFC와 사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을 규제대상물질에 추가
- 1992년 11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의정서 가입국 회의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전의 삭감일정에 없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 41종의 물질도 규제대상물질에 포함
- 제7차 당사국총회(1995년 12월, 비엔나), 제9차 당사국총회(1997년 9월, 몬트리올), 제11차 당사국총회(1999년 11월, 북경)에서 규제대상물질 감축일정을 더욱 강화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에서는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이 표명되어진다. 차별적 공동책임원칙이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지구환경보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각국이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지구환경보전 의무를 부담하지만 선진국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2)기후변화방지

-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논의는 우선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기구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시작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로 하여금 연구업무를 수행
 - 1988년 6월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회의가 개최되었고 1990년의 2차 기후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
-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국제규제화 구축작업은 근본적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활동의 근간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

- 1990년 이후 여러 차례의 정부간 협상회의(INC)를 거친 후 협약문이 작성되어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제출되었고, 여기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
 - 이후 매년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면서 기후변화 가스 감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진행
-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감축량과 일정을 담은 의정서에 합의
 - 교토의정서는 2002년에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발효

3) 생물종 다양성 보호

- 생물다양성협약은 1990년 11월부터 6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회의를 거쳐 리우회의에서 채택
 - 생물종 감소를 방지하고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
-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 부속서에서 정한 목록을 참고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이나 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함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활동을 지정 · 감시하고 생태계, 서식지 및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회복과 서식지에의 재도입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생물다양성의 조사, 탐지 및 재고유지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데이터뱅크 및 정보망을 구축해야 하며 과학적 연구, 훈련, 조사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의 확보를 상호 지원하고 개도국에 대한 생명공학 기술이전을 추진해야 함

- 동 협약의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Biosafety Protocol)에 관한 논의가 진행
-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 (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절차, LMOs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성 평가, 유전자원 제공국에 대한 이익 배분 등의 내용을 담게 됨